“경기도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

■ 코로나19 제주 3번 확진자 다녀간 현장 가보니…

확진자 다녀간 식당·편의점 등 방역 후 임시 폐쇄
“위험지역에서 오는 인원 격리 등 별도 대책 절실”

제주지역에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편의점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오전 3번째 확진자 A(48)씨가 지난달 26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자리한 식당에는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인원 3~4명이 식당 관계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인근의 다른 상가에서 관계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먼발치에서 해당 식당을 기웃거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A씨가 식당을 나와 들렀다는 함덕리의 한 노래주점 입구에는 ‘방역 작업으로 하루 쉬어갑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상인 이모(52)씨는 “아침 뉴스 등을 통해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식당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도 제주지역에서 감염된 환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난달 27일 다녀간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한 호텔 1층에 자리한 편의점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영업을 중단한다는 별도의 안내문 등이 없어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인근의 해안도로에 즐비한 점포들도 일부만 문을 여는 등 함덕해수욕장 일대 분위기가 뒤숭숭해 보였다.

호텔 관계자 손모(47)씨는 “오늘 오전 9시쯤 보건소에서 찾아와 방역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직원 4명을 보냈는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서 상황이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29일 A씨가 들른 함덕리 식당 입구에는 ‘2주간 영업을 중지한다’는 팻말이 설치돼 있었으며, 이후 다녀간 신촌리 카페에도 ‘CLOSED’라고 적힌 팻말이 현관문에 매달려 있었다.

함덕리 주민 김모(40)씨는 “중국인 유학생도 입도하게 되면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험지역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를 내리거나 관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일 제주도에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노래방 등에 임시휴업과 동시에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아래는 한산한 함덕해수욕장 주변 도로. 이상국기자

“대학내 코로나19 전파 차단 위해 총력”

송석언 제주대 총장 담화문
예방책 시행과 협조 재당부

송석언(사진) 제주대학교 총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 담화문을 냈다.

송석언 총장은 2일 ‘대학가족 여러분께 보내는 담화문’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코로나19의 대학 내 전파를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학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제주대도 개강 연기 등 개교 68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겪고 있다는 송 총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책으로 “이미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대구·경북지역 학생 중 생활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학생생활관 집중보호시설(학생생활관 5호관 D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소독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폐기물 수거,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진선희기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갈등 평행선

폐지반대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공론화 중단 주장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외고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폐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공론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2호 의제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채택한 것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공론화위는 외고 전환 모형을 크게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두고 여론조사, 도민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대책위는 “이석문 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고 폐지 방침 시점으로 밝힌 2025년보다 서둘러 외고 일반고 전환 논의를 공론화에 부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도교육청은 난감한 기색이다. 지난 2월 4차례에 걸쳐 외고 학부모와 면담해 여론조사 연기, 외고 구성원이 참여한 도민참여단 운영 등에 협의했다는 게 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던 여론조사도 3월 말에서 4월 초쯤으로 미룬 상태”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긴급 돌봄 추가 신청 안 받아요”… 현장 혼선

제주도교육청, 개학 연기에 어제부터 긴급 돌봄 운영
돌봄 필요 맞벌이 등 위해 “추가 신청 수용” 입장 달리
기간 외엔 신청 어려워… “명확한 지침 없다” 불만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에선 정해진 기간 외에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명확한 운영 지침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유치원 88곳과 초등학교 92곳에서 긴급 돌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개학은 연기됐지만 맞벌이와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25~26일 긴급 돌봄 신청을 접수한 결과 도내 유치원생의 14.3%인 921명, 초등학생 1~3학년의 8.1%인 1653명이 신청을 마쳤다.

문제는 신청 기간이 이틀로 짧았던 데다 교육부가 개학 연기 연장을 검토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추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제주시내 초등학교 5곳에 확인한 결과 4곳이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 중 한 곳만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결원이 발생해 받아줄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학교에선 “도교육청 방침이어서 어렵다”, “긴급 돌봄 신청 기간이 끝났다”, “학생 수에 맞춰 급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는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긴급 돌봄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무색하게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돌봄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에 기대야 하는 학부모도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이 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언론 브리핑으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를 문의하는 학교에도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며 “다만 급식 공급이나 수용 인원 등의 문제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간 더 개학을 연기하면서 긴급 돌봄 수요를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일부터 유치원, 학교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중앙로 지하도상가 임대료 30% 인하

코로나19 어려움 감면 조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시 중앙로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감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30%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30% 감면계획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 30% 감면에 나섰다.

현재 중앙지하도상가에는 382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감면은 이달 15일 전후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윤형기자